

연하장 보낸다고...지방선거 앞두고 수상한 명단 수집

광주시의회, 5개 자치구에 자치위원·통장 명단·주소 요구 논란 일자 연하장 발송 않기로

광주시의회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하장 발송을 이유로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과 주소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구청은 이미 명단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했고, 일부 구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2022년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 작성 제출' 제목의 공문을 광주시에 발송해 자치구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과 주소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가 5개 일선 구청에 공문을 보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5개 구청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은 적게는 800명에서 많게는 12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총 4000~50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선 행정을 도맡아 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은 지방선거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도 명단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 확보에 나서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연하장 발송을 이유로, 전례가 없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 명단을 요구하면서 일부 구청 공무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동·서·북·광산구청은 명단과 주소 등을 광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구청은 "정보제공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과거 관행과 다르게 연하장 발송 과정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과 주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한 관계자는 "연하장은 매년 통상적으로 광주시의회에서 보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모두 389명에게 발송했다"며 "해마다 통장, 자치위원의 명단을 받아 보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명단은 받았지만, 연하장 발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연말연시를 맞아 연하장 발송을 이유로, 사회 여론 주도층의 명단과 주소 등을 모으고 있는 것은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최근 '2022년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 작성 제출'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각 부서별 발송 대상자를 선정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살펴보면 각 실·과별로 역대 시의원, 언론사 부장급 이상 간부, 관련 단체장 및 기관 대표, 노동계 대표, 공기업 임원, 5·18관련 단체장, 대학교 학장 및 총장,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장, 시정 기여 문화인,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대표, 시체육회 협회장 및 이사, 생활체육 및 장애인협회장, 관광 관련 협회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단체장과 시·구의회 지방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지역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 명단 확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이재명후보 캠프 제공>

열세지역 선전하는 이재명·윤석열 TK·호남 대선 지역구도 완화 양상

이·윤 모두 두 자릿수 지지율 지역 초월 투표 성향 등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협지' 대구·경북(TK)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역대 대선에 비해 지역구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0명을 상대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20%의 지지를 얻었고, 윤 후보 역시 광주·전라에서 15%를 기록했다. 다른 여론조사의 흐름도 비슷하다. 리얼미터의 12월 2주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에서 이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23.7%였고,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지율은 18.3%였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불모지인 TK에서 비교적 '선전'하는 데는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지역적 기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TK 순회 때에도 "제가 나고 자라고 묻힐 곳", "TK 출신의 큰 정치인으로 인정해 달라"며 구애에 나섰다.

윤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서진 정책 등 호남 구애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도 호남 득표율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두 자릿수 득표로 화제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대 대선 호남 득표율은 10.5%였다.

역설적으로 두 후보 모두 지역주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각각 여야의 지역적 뿌리인 호남, 영남에 직접적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 전통적인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우리 당 사람'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견제심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는 경선 중 광주·전남에서 패배한 첫 민주당 대선 후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했고, 당 대표까지 지내 호남 기반이 단단했는데 이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 역시 영남 출신이 아니고 당내 활동 이력은 더 없다"며 "이번 대선은 지역 기반과 무관한 최초의 선거로 일종의 '탕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냉정히 말해 두 사람이 될 잘해서 상대 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지지율이 나온다기보다 '본진'에서도 크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상대가 본진에서 인기가 높으면 견제 심리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고리가 끊어진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지역이나 이념보다 '정치 효능감'에 따른 이익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해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에 멈춘 이재명 매타버스

민주당 일정 연기 결정 이 "부동산 공시가 제도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방침에 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5주에 걸쳐 충청,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지역을 3~4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매타버스 일정은 원래 8주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권혁기 대변인은 지난 17일 당사 브리핑에서 "선대위는 방역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매타버스 일정의 재개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일정을 재개하면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인 강원, 제주 세종, 수도권부터 우선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매타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 이 후보는 당분간 온라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시민들을 복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을 결정해야 했다"고 매타버스를 중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상한 위기 앞에 지난 1년 반을 돌이켜 본다"며 "코로나라는 국난에도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몰아주셨다.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남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기민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며 "더 성찰하고 성장하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